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김규판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3460-1017)

차 례 ● ● ●

1. TPP 개요
2. 일본의 TPP 협상 참여 배경과 경위
3. 일본의 TPP 협상 전략
4.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인 TP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 FTA'를 표방하면서 현재 11개 국가가 2013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2010년 3월부터 총 16차례의 협상을 전개함.
- ▶ 일본은 2012년 1월부터 TPP 9개국과의 사전협의를 걸쳐 지난 3월 15일 아베 총리가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함.
 - 일본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하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에 합류하기 위해 TPP를 선택함. 일본과 미국은 각각 2013년 4월과 6월 EU와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그간 FTA 추진실적이 부진했던 일본정부는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이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TPP 참여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함.
- ▶ 일본정부는 지난 2월 22일 미·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이후 미국의 대일(對日) 자동차 수입관세는 유지하되 자국의 농산물 시장은 보호하는 '교환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지렛대로 TPP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임.
- ▶ 일본 내 여론은 자국의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나, TPP11 중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직 유보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추가협제도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일본의 협상 참여는 확실치 않음.
 - 만일 일본이 오는 7월 또는 9월에 TPP 협상에 참여하면 TPP 협상국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올해 안에 TPP 협상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
 -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첫째,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상규범(표준)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크고, 둘째, TPP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5개국과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는 현상황에서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 및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FTA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1. TPP 개요

- TPP¹⁾ 참여국들은 2010년 3월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전개하고 협상참여국도 11개국으로 확대됨.
 - TPP의 전신인 P4(Pacific 4)는 1990년대 말 APEC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가 한계에 부딪히자 미국이 구상한 P5(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FTA 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중간에 미국과 호주가 협상에서 빠지고 브루나이가 들어와 4년여의 협상 끝에 2006년 5월 출범함.²⁾
 - 그 후 2010년 3월부터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이 P4 협상에 합류하여 공식명칭도 P4에서 TPP로 바뀌었으며, 협상참여국의 제안에 따라 당초 P4 협정문도 수정·추가되고 있음.
 - 2010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가 TPP 협상에 참여하고, 2012년 12월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추가되어 현재는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TPP 협상국들은 2010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0년 네 차례, 2011년 여섯 차례, 2012년 다섯 차례 협상을 개최하고, 2013년 3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제16차 협상을 벌였는데,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TPP Framework를 발효시키고 연말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임.
 - TPP는 FTAAP³⁾의 일환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협상범위가 매우 넓은 다자간 FTA임.
 - P4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또는 10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체결 FTA의 자유화율 역시 95% 이상에 달함.⁴⁾
 - TPP 협상의 포괄범위는 상품시장 접근, 원산지규정, SPS(위생식물검역), TBT(무역의 기술적 장벽), 무역구제,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국경간 서비스무역, 투자, 노동, 환경 등 21개 분야에 달함.
 - TPP 협상국들은 협상타결에 가장 중요한 민감품목의 예외취급 방식, 관세철폐 원칙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원산지규정,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도 협상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 관세협상 방식은 특정 TPP 협상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만 협상을 벌이는 '양자간(bilateral)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섬유제품의 원산지 규정 방법, 투자분야에서는 ISD 도입 여부,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WTO GPA 수준과의 조절,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취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임.
- ※ 주요 분야별 TPP 협상 현황과 쟁점은 <부록> 참고. 단, TPP는 중간 협상결과에 대해 정보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日本經濟新聞, 2013년 3월 1일자).

1)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하 TPP로 약칭).
 2) P5가 무산된 다음, 2002년 10월 P3(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만으로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05년 4월 브루나이가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P4가 형성되었음. P5가 무산된 이유로는 당시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TPA(무역촉진권한)와 같은 일괄협상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호주가 FTA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3)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2006년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2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FTA 구상임.
 4) 현재 TPP 협상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세철폐 예외도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TPP 협상국의 민감품목을 보면, 미국은 설탕, 유제품, 호주는 의약품, 가죽제품, 뉴질랜드는 가죽제품, 의약품, 캐나다는 유제품, 칠레는 유제품, 밀, 설탕, 페루는 쇠고기, 닭고기, 쌀, 말레이시아는 승용차, 강관, 베트남은 이륜차, 승용차, 멕시코는 농산물, 섬유제품 등임.

2. 일본의 TPP 협상 참여 배경과 경위

가. 참여 배경

- 일본의 TPP 참여 선언은 미국-EU 간 FTA인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추진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규범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부합함.
 - 일본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월 15일 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금이 TPP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글로벌 통상규범의 확립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강조함.
 - 아베 총리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집합체인 TPP에 합류하는 것이 자국은 물론 아태 지역의 안전보장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밝혀 일본의 TPP 참여가 사실상 중국 견제의 일환임을 시사함.
 -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에 회귀한다는 전략 하에 처음부터 베트남을 TPP에 합류시킨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TPP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 강화를 역설하는 일본 아베 총리의 TPP 참여 선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일본은 2014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EU와의 FTA 협상을 2013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2014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EU와의 TTIP 협상을 2013년 6월 시작할 예정임.
- 일본정부는 TPP 참여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무역·투자 자유화를 만회하여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2012년 미국과 EU의 FTA 발효 국가·지역과의 무역비중은 각각 37.8%, 26.9%에 달하며, 한국 역시 33.9%로 미국 다음이나 일본은 18.6%로 중국의 2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일본의 13개 FTA 체결 국가·지역(발효시점): 싱가포르(2002. 11), 멕시코(2005. 4), 말레이시아(2006. 7), 칠레(2007. 9), 태국(2007. 11), 인도네시아(2008. 7), 브루나이(2008. 7), ASEAN(2008. 12), 필리핀(2008. 12), 스위스(2009. 9), 베트남(2009. 10), 인도(2011. 8), 페루(2012. 3)
 - 일본정부는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 EU의 FTA 추진이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TPP 참여에 따른 이익보다는 불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0년 10월 일본이 중국·EU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TPP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EU·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2020년 자국의 실질 GDP는 10.5조 엔(1.53%)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발표한 바 있음.
 - 특히 일본정부는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이들 3개 시장에서 자국의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한국기업에 크게 밀릴 것으로 우려함.
 - ※ EU의 수입관세: 한·EU FTA 발효 후 5년 이내 철폐 ① 승용차 한국 10% → 0%, 일본 10% ② 박형 TV: 한국 14% → 0%, 일본 14%, 미국의 수입관세: 한미 FTA 발효 후 10년 이내 철폐 ① 승용차(5년) 한국 2.5% → 0%, 일본 2.5% ② 트럭(10년): 한국 25% → 0%, 일본 25%, ③ 베어링: 한국 9% → 0%, 일본 9%

나. 경위

- 국제적으로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점은 민주당 간(菅直人) 총리가 TPP 협상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201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감.
 - 2011년 11월에는 민주당 노다(野田佳彦) 총리가 APEC 회의를 앞두고 TPP 협상참여에 관한 사전협의를 당사국들과 개시할 것이라고 표명하였으나, 당 내분이 겹치면서 20% 이하의 낮은 지지율로 추진력을 상실함.
 - 일본은 TPP 협상 참여를 위한 사전협의를 2012년 1월부터 TPP 9개국과 실시하였고, 이 중 베트남, 브루나이, 페루,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6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냄.
 - 그러나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일본의 TPP 협상참여는 환영하지만 자동차, 보험,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고 밝힘.
 - 2012년 12월 16일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조기에 TPP 협상참여를 공식 표명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함.
 -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보다 소극적인 자세로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조건으로 하는 한, TPP 참여 반대라는 공약을 내걸었음.
- 일본 내에서는 2월 22일 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기로 자국의 TPP 협상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임.
 - 미·일 공동성명은 “TPP 협상참여 시 일방적으로 모든 관세철폐를 사전에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라고 명시함. 단, 양국 정부는 일본의 자동차와 보험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함.
 - 2013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 때까지 아베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한 일본정부의 TPP 참여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일본경제신문사와 TV도쿄가 3월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69%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베 총리의 TPP 협상 참여 선언에 대해 56%가 긍정적으로, 25%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3. 일본의 TPP 협상 전략

가. 기본방향

- 일본정부(내각관방)는 3월 15일 아베 총리의 TPP 협상 참여 선언에 맞춰 TPP 참여에 따른 경제효과를 발표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역점을 둠.
 - 일본정부의 발표⁵⁾에 따르면, 자국의 TPP 참여는 연간 GDP의 0.66%에 해당하는 3.2조 엔의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GDP 구성항목별로 보면, 소비 3.0조 엔, 투자 0.5조 엔, 수출 2.6조 엔, 수입 2.9조 엔 각각 증가함. 단, 농업부문은 쌀 1.1조 엔 등 총 3.0조 엔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상기 일본정부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에는 모든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를 가정하고 있고, 서비스·투자 자유화나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일본정부는 TPP 협상에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는 기존 협상국 간의 합의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 협상 참여를 선호함.

- 일본정부는 현재 21개 TPP 협상 분야 중 상품시장 접근, 투자, 지식재산권 등 자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조기 협상 참여를 통해 국익을 실현한다는 목표임.
- 일본정부는 3월 15일 아베 총리가 협상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의회 통고(90일 전의 사전통고) 후 승인 일정에 맞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협상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단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6차 협상 회의에서 의장국 싱가포르가 7월 TPP 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7월부터 일본이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도 대두됨.

■ 아베 총리는 국회 연설(3월 4일)을 통해, 향후 TPP 협상 추진 시 일본정부가 견지하게 될 기본방향으로서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6개 항목을 제시함.

- 아베 총리가 제시한 6개 항목에는 ①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조건으로 하는 한 협상참여 반대, ② 자유무역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치목표(수입할당)는 수용 불가, ③ 공적의료보험제도 사수, ④ 식료품의 안전 기준 사수, ⑤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ISD 조항 도입 반대, ⑥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공세와 수세 병행이 포함됨.

■ 일본정부는 TPP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집권 자민당 역시 TPP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킴.

- 일본정부는 TPP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석교섭관과 국내조정총괄관을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TPP 협상이 시작되면 교섭팀 70명, 국내조정팀 30명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임(3월 22일).
- 자민당은 국회의원 60명으로 구성된 TPP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산하에 주간회의와 정보수집·분석팀, 교섭대응팀을 설치함(3월 1일).
- 주간회의는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업체와의 조정 역할을 맡고, 교섭대응팀은 TPP 협상 분야별 협상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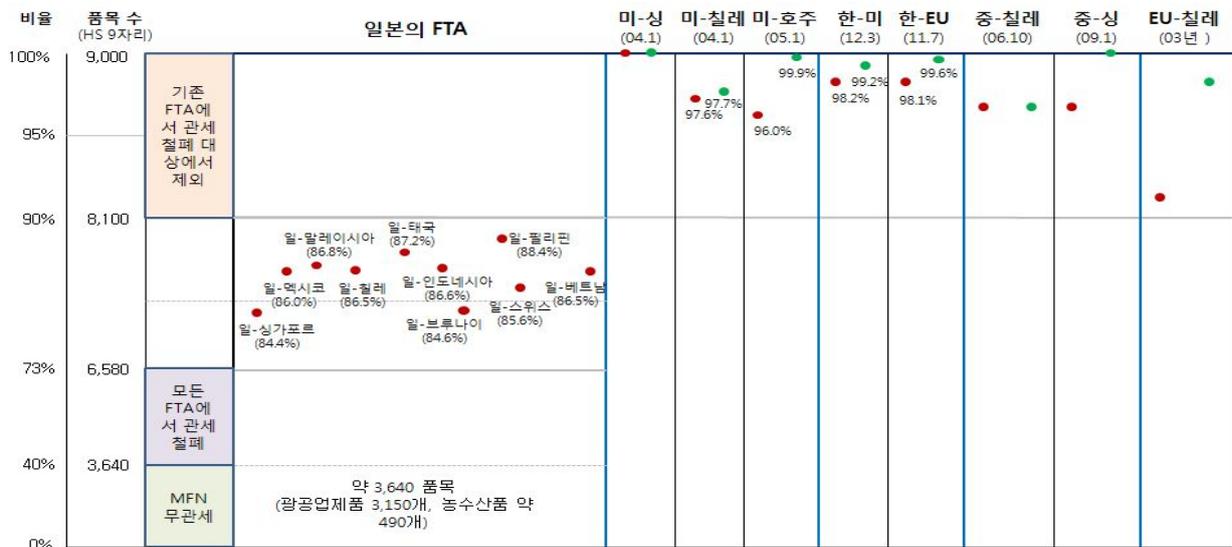
나. 전략

- 일본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지렛대로 TPP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임.

5) 内閣官房, 「関税撤廃した場合の経済効果についての政府統一試算」, 2013. 3. 15, http://www.cas.go.jp/jp/tpp/pdf/2013/130315_touitsushisan.pdf.

- 일본의 기체결 13개 FTA의 자유화 수준은 90% 미만으로 한·미 FTA 등 세계 주요국의 FTA와는 달리 자유화 수준이 낮음(그림 1 참고).
- o 일본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농산품은 834개이고 광·공산품까지 합하면 약 940개임. 쇠고기(51개), 보라밀(109개), 쌀(58개), 곤약(3개), 잡콩(16개), 설탕(81개), 전분(50개), 유제품(188개), 돼지고기(49개), 수산물(91개), 합판(34개), 기타(104개)

그림 1. 일본의 기체결 FTA의 자유화율



주: 자유화율이란 HS 9자리 기준으로 즉시 및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수가 전체 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經濟産業省(2012), 『通商白書』, p. 390.

■ 일본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농산물 5개 품목군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표 1 참고).

- 일본 내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2월 22일 미·일 정상회의 이후 쌀(관세율: 778%), 유제품(360%), 설탕(328%), 밀(252%), 쇠고기(38.5%) 등 5개 품목군을 '성역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함.
- o 니시카와(西川公也) 자민당 TPP 대책위원장은 쌀, 설탕·전분, 유제품, 보리, 고기 등 다섯 항목 586개 품목의 성역화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TPP 협상탈퇴도 불사한다는 결의문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함(3월 13일).

표 1. 일본의 관세철폐 제외 주장 농축산물 5대 품목

구분	관세율	국내생산액
쌀	778%	1조 8,240억 엔
유제품	360%	6,613억 엔
설탕	328%	1,461억 엔
밀	252%	296억 엔
쇠고기	38.5%	5,029억 엔

주: 일본은 1993년 GATT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매년 70만 톤의 쌀을 수입(minimum access)하는 대신 778%의 관세율을 부과. 자료: 日本經濟新聞(2013.2.26).

- 한편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TPP 협상과는 별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2013년 2월부터 국내 광우병 (BSE) 검사 대상 월령 및 쇠고기 수입제한 대상 월령을 30개월로 상향 조정함.
 - 2월 22일 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부가 자동차와 보험 분야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 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가 TPP 협상과 무관하다는 여론이 대세임.
- 자동차 분야에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일 간 사전협의를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데 합의함.
 - 미·일 정부는 지난 3월 5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관세를 한·미 FTA보다 장기간 유지하는 데 합의함.
 - ※ 일본 외무성 간부는 “미국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20년 정도로 잡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라고 언급함(毎日新聞, 2013년 3월 6일자).
 - 일본의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PHP) 운용과 관련해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적용 한도를 연간 2,000대 이내 에서 5,000대 이내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PHP)는 일본정부가 외국인 자동차의 국내수입에서 연간 2,000대 이하의 차종에 대해서만 안전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임.
 - 일본의 경자동차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형차에 비해 1/5~1/10 수준에 불과한데, 미국은 이러한 과세차별이 자 국산 트럭의 일본 진출에 불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함. 일본의 자동차등록제도 (車検) 간소화도 쟁점 중 하나임.
 - 1980년대 이후 미·일 무역마찰과 엔고 등을 배경으로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현지생산 비율을 늘리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000만 대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 중 약 20%에 해당하는 200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음(2012년: 약 170만 대). 단, 미국은 일본에 2만 대 정도 수출하고 있음.
 - ※ 일본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표 2] 참고
 -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자동차 중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도요타와 닛산이 약 30%, 혼다가 10% 미만에 불과 하고, 트럭의 경우 대부분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판매하고 있음.
 -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무관세(0%)이지만, 유통, 인증절차, 세제 등 비관세장벽이 많고 시장이 폐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표 2. 일본 내 차종별 수입차의 비중

(단위: 대수, %)

차종	2009		2010		2011	
	대수	비중 ²⁾	대수	비중 ²⁾	대수	비중 ²⁾
합계 ¹⁾	160,904	3.5%	182,082	3.7%	205,857	4.9%
승용차	159,143	4.2%	180,255	4.5%	203,800	6.1%
트럭	1,735	0.3%	1,718	0.2%	1,999	0.3%
버스	26	0.2%	109	0.9%	58	0.6%

주: 1) 일본 자동차업체가 해외에서 제조·수입한 차량 대수는 제외함.

2) 수입차 비중은 일본 자동차업체가 국내에서 제조한 차량과 해외에서 제조·수입한 차량의 합계 대비 수입차의 비중을 구한 것임.

자료: 日本自動車輸入組合, 「日本の自動車市場2012」, http://www.jaia-jp.org/wp-content/uploads/pdf_data_2012icmj.pdf.

- 일본의 보험(郵政)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은 일본우정 지주회사(日本郵政, Japan Post Holdings)의 사업범위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부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은 일본우정 지주회사와 민간기업 간 대등한 경쟁조건 확보를 요구하면서, 일본우정이 신상품 등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 일본우정(Japan Post Holdings)은 지주회사로서 우편국(Japan Post Network), 우편사업(Japan Post), 우편저금은행(Japan Post Bank), 간뽀생명보험(Japan Post Insurance) 등 4개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일본우정 주식회사의 지분은 정부가 100% 보유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2010년 4월 일본우정의 사업범위 확대를 용인하는 우정개혁법안을 각의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외국무역장벽보고서(2011. 3)를 통해 WTO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 간뽀생명보험은 당분간 일본 국내 압보험 시장에 대한 진입을 자제하기로 하였고(2012. 5), 2013년 4월 취급예정이었던 학자(學資)보험(2012. 12, 인가취득)도 당분간 연기한다는 계획이나, 우편저금은행은 2012년 9월 신규 사업으로 개인용 주택대출업무를 개시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임.
 - ※ 일본 국내 압보험 시장의 점유율(2011년): Aflac(미국) 74%, Metlife(미국) 5%, 기타 일본계 생명보험회사 21%
-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사전협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 · 정부조달 · 원산지규정 등의 분야에서 공수 입장을 적절히 배합한다는 방침임.
 - 아마리(甘利明) TPP 담당장관은 일본이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을 주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3월 15일).
 - 서비스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외자 소매업체 진입 규제와 말레이시아의 외자 소매 및 외식산업 진입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를 통해 일본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의 개도국 진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전략임.
 -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미국 주정부가 공공사업 발주 시 자국기업을 우대하는 경향과 말레이시아의 'bumiputera(말레이시아 민족)' 우대정책을 문제시하고 있음.
 -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TPP 협상국 간에 원산지규정에 관한 규범이 제각각이라고 보고, 절차의 통일과 간소화를 주장한다는 입장임.
 - 일본이 TPP 협상에서 수세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상기 농산물 수입관세 외에도 위생식품검역, 의약품의 지재권 보호, 투자 분야에서의 ISD 조항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 ISD 도입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기체결 투자협정에 ISD 조항을 도입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⁶⁾ 아베 총리가 내건 참여조건 6항목에 "국익에 반하는 ISD 조항 반대"가 포함되어 있어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아마리 TPP 담당장관은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는 TPP 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TPP 참여에 따른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유명무실화 우려⁷⁾를 일축함(3월 18일).

6) 外務省(2011.11), 「TPP協定において慎重な検討を要する可能性のある主な点」, p. 5 참고

7) 미국은 2006년 6월 공표한 '미·일 투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본정부에 '의료영리화'와 '혼합진료' 허용을 요구한 바 있음. 일본의사회 등은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면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범위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공적의료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나아가 의료영리화와 의료기관의 혼합진료(공적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를 함께 하는 행위) 허용은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확대를 초래하여 결국은 미국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고 주장함. 馬田啓一(2011), 「米国のTPP戦略と日本の対応」, 『国際貿易と投資』, 85号, pp. 16-17 참고.

표 3. TPP 협상에서 일본의 공세·수세 예상 분야

공세 분야		수세 분야	
분야	요소	분야	요소
서비스	베트남의 소매업 개점 규제 완화	관세	농산품의 관세(쌀: 778%, 쇠고기: 38.5% 등) 유지
정부조달	말레이시아의 bumiputera 우대정책과 미국 주정부의 국내기업 우대정책 시정	위생식물검역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규정 유지
원산지규정	간소하게 관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 공통의 프레임워크 구축	지식재산권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지나치게 미국기업에 유리한 규범이 제정되지 않도록 유의
지식재산권	해적판·모방품 대책의 강화	투자	공정한 분쟁처리 프레임워크 확립
관세	승용차(미국: 2.5%, 베트남: 83%) 등의 관세 인하	무역규제	세이프가드 남용 저지

자료: 日本經濟新聞(2013. 3. 17).

4. 전망과 시사점

가. 일본의 TPP 참여 전망

- 일본 아베 총리의 TPP 참여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TPP 협상 참여까지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승인과 미국과의 추가 협의 및 의회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일본의 기대처럼 7월 또는 9월 협상참여가 실현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음.
- 호주(관심 품목: 보리, 쇠고기, 설탕, 유제품)는 2007년 4월부터 일본과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일본 측에 요구한 밀,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고,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해서도 아직 유보 입장을 견지함.
- 뉴질랜드(관심품목: 유제품)는 일단 일본의 TPP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TPP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유제품이 협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미국과 캐나다를 견제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입장은 미국이 어떻게 하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가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일본의 TPP 참여를 환영하지만 중요한 시안이 남아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자동차 협상이 완전 타결되기까지 미국정부가 의회에 일본의 TPP 참여를 통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표출함(靜岡新聞, 2013.3.25).
 - 특히 미국정부는 2007년 TPA(무역촉진권한)의 기간만료로 일괄협상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의회 및 관련 업계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임.
- 올해 안에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는 교환전략이 우선 미·일 양국 간에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미·일 양국 간 합의를 호주와 뉴질랜드가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 2013년 중 일본의 TPP 협상참여가 실현되면 TPP 12개국 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서 협상 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21개 TPP 협상 분야 중 상품시장 접근, 투자, 지식재산 등 일본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발 참여국인 일본으로서는 결코 불리한 여건이라 할 수 없음.
- 그러나 TPP 협상은 현재 가장 중요한 상품시장 접근 분야에서 민감품목의 예외취급 방식, 관세철폐 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ISD 조항),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도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o 일본이 올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미국 등과의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TPP 협상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협상타결이 그만큼 지연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o TPP 협상에 개도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통상규범 확립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하면 FTA로서 TPP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모순도 존재함.
 - ※ 니사키와 자민당 TPP 대책위원장이 요구한 농산물 5개 항목, 586개 품목의 성역화를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시수하는 경우, 일본의 자유화를 역시 93.5%에 불과하게 됨.

나. 시사점

-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
 -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상규범(표준)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o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이 EU와의 FTA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한 점은 향후 세계경제 질서가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국제표준으로 부상하게 됨을 예고함.
 - 한편,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TPP 협상 참여국 중 아직 우리나라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o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Petri, Plummer and Zhai(2012, 2013)는 일본이 2013년 중 TPP에 참여할 경우, 2025년 우리나라의 GDP는 28억 달러 감소하는 대신 일본의 GDP는 1,046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표 4. 한·일 양국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¹⁾

(단위: 10억 달러, 2007년 불변가격 기준)

구분	2025년 GDP	GDP 증감(률)		수출 증감(률)	
		TPP12 ²⁾	TPP13 ²⁾	TPP12 ²⁾	TPP13 ²⁾
미국	20,273	76.6(0.4%)	77.5(0.4%)	123.5(4.4%)	124.2(4.4%)
중국	17,249	-34.8(-0.2%)	-46.8(-0.3%)	-43.7(-1.0%)	-57.4(-1.2%)
일본	5,338	104.6(2.0%)	119.4(2.2%)	139.7(11.2%)	175.7(14.0%)
한국	2,117	-2.8(-0.1%)	45.8(2.2%)	-7.0(-1.0%)	88.7(12.4%)
세계 전체	103,223	223.4(0.2%)	294.7(0.3%)	305.2(1.1%)	443.7(1.6%)

주: 1) TPP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자유화 효과도 포함. 이때 각 변수별 변화는 최근 미국이 체결한 5개 FTA를 참고. 단, () 안은 증가율(%).

2) TPP12: 2013년 중에 일본이 TPP 협상을 타결한다는 시나리오, TPP13: 일본과 한국이 각각 2013년과 2014년 중에 TPP 협상을 타결한다는 시나리오.

자료: Petri, Plummer and Zhai(2012, 2013).⁸⁾

-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2014년 중 TPP에 참여하면 2025년 우리나라의 GDP는 458억 달러 증가(GDP 증가율은 일본과 동일한 2.2%)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는 현 상황에서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 및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TPP 11개국 중 미국 등 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과도 협상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간 FTA 협상을 보다 실속 있게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실익 관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음.
-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TPP의 중국경제 성격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자칫 한·중 FTA 및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동아시아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한·중·일 FTA나 RCEP 협상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FTA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면 중국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경제패권 경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도 중국과의 경쟁에 가세할 것이므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음.
- 단, 협상과정에서 더욱 강경해진 중국과 일본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타결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 한·중·일 FTA의 경우, 지난 3월 26일부터 3일간 1차 협상을 마쳤는데,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TPP 참여 선언을 계기로 중국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일본은 한·중 양국에 대해 공산품 관세철폐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임(日本經濟新聞, 2013년 3월 27일자).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와 RCEP 등 동아시아 다자간 FTA 협상에서 중·일 간 경쟁양상의 변화를 감안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8)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2012. 11),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Asia-Pacific Integration: A Quantitative Assessm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2013), *Adding Japan and Korea to the TPP*,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asiapacifictrade.org>. (March 7)

부록. 주요 분야별 TPP 협상 현황

분야	현황 및 주요 쟁점
상품시장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월 이후 품목별 관세 철폐·인하에 관한 offer와 request를 양자가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 중이다. 민감품목의 예외취급 방식, 관세철폐 원칙 등에 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 관세협상 방식은 특정 TPP 협상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만 협상을 벌이는 '양자간(bilateral)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함.¹⁾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제외'나 '재협상'은 원칙상 인정하지 않고,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친 단계적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이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²⁾ 단, 민감품목 미확정이라는 offer를 제시하는 국가도 존재함. ◦ 즉시 관세철폐율을 90~95%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나, 즉시 철폐율을 더 낮추자는 의견도 존재함.
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참여국간에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모색 중이고,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을 둘러싸고는 민감품목 이외에서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상품시장 접근 분야의 협상 결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섬유제품의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체결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한 경우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견이 지속됨.(이른바, yarn forward rule 문제) ◦ 원산지 누적 규정의 채택 가능성이 높으나, TPP 협정 발효시점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할 것인지, 모든 체결국의 관세가 철폐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원산지 증명 주체 문제는 수출업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기증명' 제도의 채택을 중심으로 협상 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범과 관련해서는, ① 투자보호 대상인 투자자와 투자재산의 범위, 투자보호 내용인 내국 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과 보상, 특정조치 이행 요구의 금지³⁾ 등, ② ISD 도입 여부,⁴⁾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와 투자자보호 간 균형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ISD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기초로 협상 진행 중.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GPA(정부조달협정)⁵⁾와 동일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 정부 범위를 지방정부 이하로 확대할 것인지, 정부조달 기준액을 참여국 공통의 단일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협상 중. ◦ 말레이시아의 Bumiputera(말레이시아 민족) 우대정책과, 외국기업이 공공사업을 수주할 경우 자국 기업과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는 베트남의 정부조달정책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함.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권 보호수준을 WTO TRIPS(무역관련 지적권 보호협정)+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과 상표, 지적표시, 저작권, 특허, 의약품 관련, 집행기관 등 개별 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 ◦ TPP 협상 11개국 중 미국, 호주, 싱가포르, 칠레, 페루 등은 기체결 FTA에 WTO TRIPS+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반발. 특히 뉴질랜드는 의약품의 특허기간 장기화에 반대하고 있음.
경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국들의 기체결 FTA에서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통합 텍스트(안) 마련 ◦ 통합 텍스트(안)에는 경쟁법의 원칙, 경쟁당국의 설치·유지, 공정한 경쟁법 집행,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경쟁당국 간 기술협력 등이 포함됨. ◦ 단, 미국이 2011년 10월 말 국영기업에 관한 텍스트(안)를 제안하였는데, Temasek 등 국영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싱가포르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반발이 심함.
국경 간 서비스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 분야에서는 WTO의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정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의거하여 각국이 작성한 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단계 ◦ 자적·면허의 상호 승인과 관련해서는 협정 발효 후에 관심 국가들이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대두됨.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 분야에서는 투명성, 무차별성, 신규 금융서비스의 공정한 취급, ISD 적용,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협상 중이고,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이지만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검토 중.

- 주: 1) 미국의 '양자간 방식' 주장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TPP 협상국 중 양자간 FTA 미체결국들만 다자간 방식으로 관세협상을 벌인 다음, 그 결정을 기체결 FTA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함. 馬田(2011, p. 13)는 미국이 '양자간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미·호주 FTA에서 인정받은 설탕과 유제품 등에 대한 민감품목 제외조치를 TPP에서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찾고 있음.
- 2) 미국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 각각 설탕과 유제품을 민감품목의 '제외' 품목으로 취급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호주와 뉴질랜드가 반발함.(伊藤田中⁹⁾ 2013, p. 9) 한편, 미국 하원의원 47명은 2010년 1월, 값싼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TPP 협상에서는 유제품을 민감품목의 '제외' 품목으로 지정해달라는 서한을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제출한 바 있음.(馬田 2011, p. 13에서 재인용. 원자료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November 1, 2010.)
- 3) 특정조치 이행 요구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WTO의 TRIM(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에 위배되는 기술이전 요구나 임원국적 요구 등을 포함할지 논의 중.
- 4) ISD(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도입을 주장하는 미국 측에 대해, 과거 담배상자의 디자인에 대한 규제강화 문제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적이 있는 호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5) TPP 협상 11개국 중 GPA 체결국은 미국과 싱가포르, 캐나다뿐이고, 2011년 12월에는 조달절차에서 전자수단의 사용 장려, 개도국에 부여되는 우대조건의 명시화 등을 중심으로 협정을 개정(단, 한국과 일본은 기체결).

자료: 国家戦略室(2012), 『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http://www.npu.go.jp/policy/policy08/bunya.html>) 및 伊藤田中(2013)를 참고하여 작성함.

9) 伊藤白田中菜採児(2013. 2. 12), 『環太平洋經濟連携協定の概要』, 『調査と情報』, 国会図書館 Issue Brief No. 770.